

청년층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의 변화*

- 가구단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

반 정 호**

I. 머리말

2010년 들어 성장률의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침체에 악화되었던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회복되고 있으나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별다른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정성미, 2010). 2010년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이 늘면서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50대 취업자가 31만 명 정도 증가하였고, 30대 취업자는 3만 7천 명 정도 증가에 그쳤으며, 반면 20대 청년층(20-29세)의 취업은 오히려 7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청년실업률은 2010년 8월 현재 7.1%로 전년동기대비 1.0%p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높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중 청년 취업애로층¹⁾은 실업자(37만 명)의 3.14배인 116만 2천 명으로 2009년 수치를 상회해 청년층의 약 1/4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실상 실업자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빈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청년기의 고용불안과 실업의 장기화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생애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토대를 약화시켜 사회병리현상을 유발하는 등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손혜경, 2009; 삼성경제연구소, 2010).

* 이 글은 청년층의 고용변화에 따른 해당가구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이번 호에서는 청년층의 고용변동과 소득수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호에서 게재하기로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1) 일반적으로 취업애로층은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학원통학+취업준비자), 쉬었음,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등을 모두 합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구조변화로 인해 청년고용이 과거보다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고용 악화가 초기 청년기(20-24세)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30대까지 이어진다면 근로빈곤이 청년기 전체로 상시화되어 나타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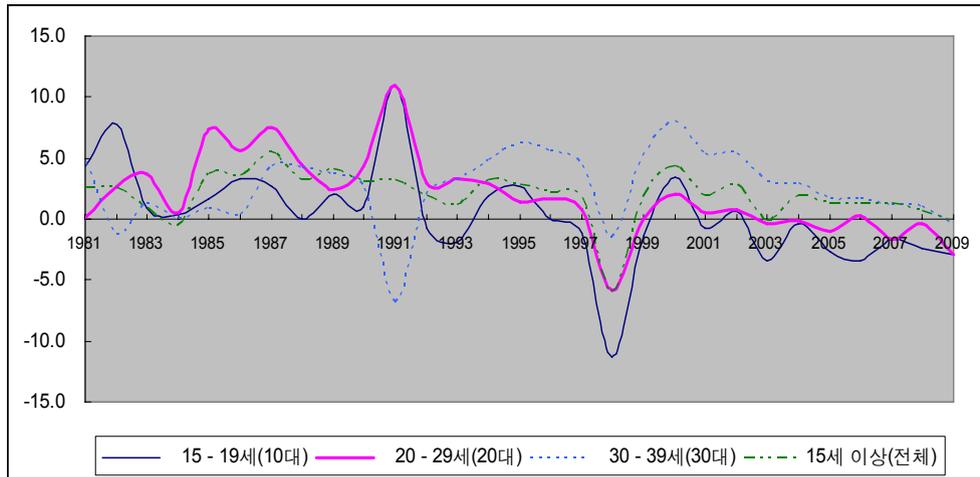
그 동안 청년층 고용과 가구의 소득불평등(빈곤)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청년층이 일반적으로 지칭되던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보다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가 용이한 인구집단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계층보다 소득불평등 수준도 낮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교육 및 인적자본의 향상을 통해 취업이나 소득확보를 어렵게 하는 귀속적 요인(ascriptive status)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악화된 대표적인 계층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은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이와 같은 고용불안(악화)이 가구소득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연령별 코호트 분석을 통해 초기 청년기의 고용불안이 후기 청년기 혹은 장년기까지 이어져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동시에 청년층의 고용형태에 따른 가구 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²⁾

II. 청년층 고용실태와 변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인구에서 청년고용의 실태와 추세 및 가구단위의 미시자료(통계청, 「가계조사」)를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의 고용형태

2) 청년층 혹은 청년기는 신체적인 성숙이나 정신적인 발달 등 심신양면에 걸쳐 급격히 변화하여 아동에서 성인(成人)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기는 신체적 혹은 정서적 발달은 물론 사회적으로 직업이나 결혼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거나 실행하는 시기로 정의되기도 한다. 신체적 혹은 정서적 발달의 측면에 기초해 청년기 연령구분은 통상적으로 20-29세 연령에 있는 인구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고용의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과거에 비해 늦추어짐에 따라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한 부모세대로부터 독립이 늦게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세대의 연령구분을 20-29세로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년층을 20대 연령계층 뿐만 아니라 30대까지 확장하여 보다 사회적인 현실에 가까운 청년세대의 고용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20대 연령계층과 30대 연령계층의 비교를 통해 고용변동의 이질적 특징들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취업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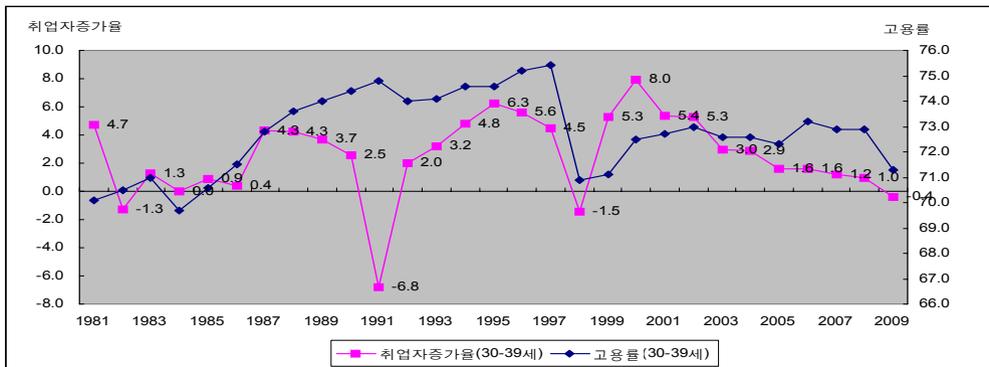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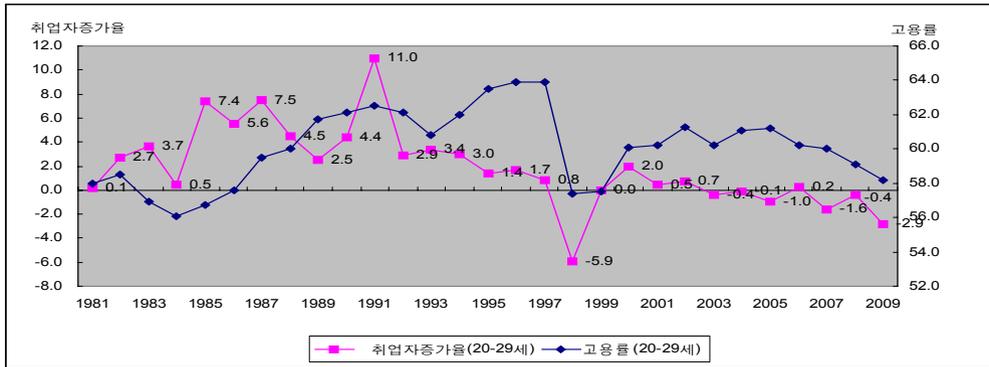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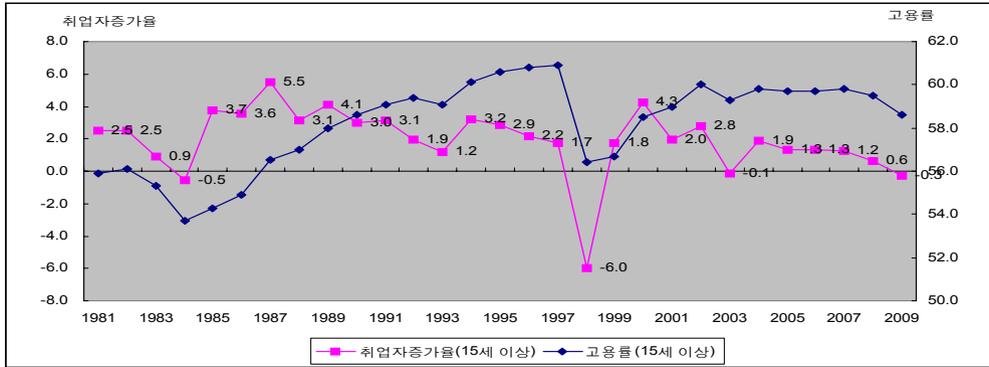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3) 청년층 고용실태 추이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취업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청년층의 경우 1998년 취업자 증가율이 -5.8%로 크게 감소했고, 이후 2002년까지 소폭 증가해 왔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2.9%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는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취업자 증가율이 -1.5%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고용감소가 소폭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고용이 빠르게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둔화되었고 2009년에는 -0.4%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0대와 50대의 경우는 1998년 취업자 증가율은 각각 -4.7%, -6.7%로 20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지만 이후 꾸준히 고용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4.6%, 4.3%의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부표 1 참조).

20-3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이들 연령계층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2005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저출산의 영향으로 20-30대 연령계층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이들 계층의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조건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고용흡수력이 감소하는 등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

3) 청년층 코호트별 고용변화 및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분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20-24세 연령코호트(코호트 1)에서의 시기별 표본수 변동이 다소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비교모형에서는 1988~1993년, 단기간 비교모형에서는 1998~2003년 사이 표본수가 크게 증가해 표본의 이질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2] 연령별 취업자 증가율 및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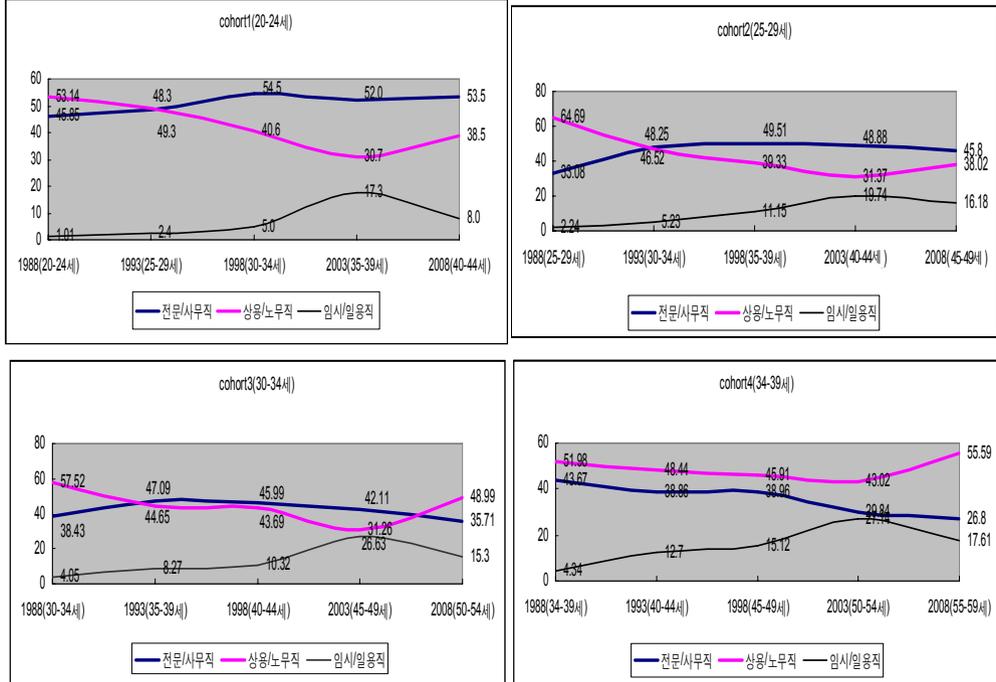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구단위의 미시자료(통계청, 『가계조사』)를 중심으로 20-30대 청년층의 고용형태 변화를 코호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 3]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청년층 연령코호트별(가구주 기준)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4) 1988년 시점에서 초기

[그림 3] 청년층 연령코호트별 고용변동: 1988-2008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청년기(20-24세)에 해당되었던 코호트 1의 경우, 1988년 전문·사무직 45.9%, 상용·노무직 53.1%, 임시·일용직 1.0%로 구성되어 있다.5) 이들이 중년기가 되는 2008년(40-44세) 시점에서는 전문·사무직 53.50%, 상용·노무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38.5%, 8.0%로 임시·일용직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상용·노무직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호트 1의 주요한 특징은 전문·사무직이 1998년 시점까지 증가했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의 감소와 함께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8년 당시 20-24세 연령계층은 학교 교육을 아직 마치지 않았거나 남성의 경우 군입대 등의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이 코호트에서 노동시장에

- 4) 코호트 분석은 일정 시점의 일정 연령대 표본집단을 다른 시점에서 변화한 연령대 표본집단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서 표본의 속성이 유사할 수 있지만 패널조사와는 달리 중간에 표본구성이 바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코호트 분석은 서로 다른 두 시점의 표본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된 변화의 내용이 패널분석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5) 전문·사무직은 관공서 또는 국·공립병원 및 개인회사, 공장, 학교 등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 기술적, 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상용·노무직은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 포함)에 고용되어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 임시·일용직은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 포함)에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매일 계약에 의하여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진입한 계층은 주로 고졸 청년층이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5년의 시차를 둔 1993년 및 1998년 두 시점에서 25-29세, 30-34세가 된 이들은 학교 교육을 마친 연령계층으로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전문·사무직 고용증가와 상용·노무직 고용감소를 주도했으며, 동시에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함께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호트 2는 1988년 시점에서 25-29세였던 중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코호트로 이들의 고용형태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사무직 고용비중은 1998년 시점(35-39세)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고,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은 1988년 64.7%에서 2003년(40-44세) 31.4%로 크게 감소했고 2008년(45-49세)에는 38.0%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임시·일용직은 1988년 2.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6.2%까지 증가했다. 코호트 3의 경우도 코호트 2와 유사한 고용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코호트 3은 사무·전문직 및 상용·노무직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코호트 4는 35-39세 연령코호트의 20년 가량의 고용변동을 보여주는데 전문·사무직 고용비중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988-2008년까지 장기간의 청년층 코호트의 고용변동을 살펴보면, 연령코호트별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상용·노무직의 고용감소와 임시·일용직의 고용증가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20대 초반(20-24세)과 후반(25-29세)의 연령코호트에서는 전문·사무직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30대 연령코호트에서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대부분의 코호트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코호트 분석이 동일대상을 추적하는 종단자료나 패널분석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사한 인자를 공유한 집단이 시간 경과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특징들을 분석하는 기법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앞선 분석의 결과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또한 초기 청년기에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부여받은 계층은 후기 청년기에 이르도록 안정된 고용지위로 옮겨가지 못하는, 즉 불안정 고용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표 1>은 1988-1997년과 1998-2008년 두 기간으로 나누어 20-30대 청년층 연령코호트별 고용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1987년 시점에서 초기 청년기에 해당했던 20-24세 청년층(코호트 1)의 사무·전문직 고용비중은 41.4%로 이들이 30-35세가 되던 1997년에는 그 비중이 53.5%로 증가했다.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은 1987년 55.9%에서 1992년 51.0%, 1997년 39.9%까지 하락했으며,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1987년 2.8%에서 1997년 6.7%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코호트 2는 사무·전문직 및 임시·일용직 고용비중

〈표 1〉 청년층 연령코호트별 고용변동: 1988-1997년 및 1998-2008년 비교

		1987	1992	1997	1998	2003	2008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cohort 1 (20-24세)	사무/전문직	41.4	44.3	53.5	49.0	57.2	62.9
	상용/노무직	55.9	51.0	39.9	48.1	32.7	34.4
	임시/일용직	2.8	4.8	6.7	2.9	10.1	2.7
		25-29세	30-34세	35-39세	25-29세	30-34세	35-39세
cohort 2 (25-29세)	사무/전문직	38.6	48.4	49.1	49.1	59.7	58.9
	상용/노무직	57.9	46.2	40.9	45.3	27.2	36.1
	임시/일용직	3.5	5.4	10.0	5.7	13.1	5.0
		30-34세	35-39세	40-44세	30-34세	35-39세	40-44세
cohort 3 (30-34세)	사무/전문직	39.0	42.8	40.8	54.5	52.0	53.5
	상용/노무직	55.3	50.7	47.6	40.6	30.7	38.5
	임시/일용직	5.6	6.5	11.6	5.0	17.3	8.0
		35-39세	40-44세	45-49세	35-39세	40-44세	45-49세
cohort 4 (35-39세)	사무/전문직	39.0	42.3	37.1	49.5	48.9	45.8
	상용/노무직	51.8	46.9	50.1	39.3	31.4	38.0
	임시/일용직	9.2	10.8	12.9	11.2	19.7	16.2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 증가한 반면,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은 감소하였고, 코호트 3과 4는 사무·전문직 및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이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분석 기간 동안에는 모든 연령코호트에서 상용·노무직 고용감소와 임시·일용직 고용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추세적 경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환위기가 시작된 시점(1997년)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998-2008년 기간을 살펴보면, 1998년 시점에서 초기 청년기에 해당했던 코호트 1의 사무·전문직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8년 49.0%에서 2008년 62.9%까지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무·전문직 고용의 증가는 코호트 2(25-29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반면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 후기 청년기(코호트 3과 4)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무·전문직 고용비중이 감소한다. 1998년 시점을 기준으로 초기 및 중기 청년기(코호트 1과 2)에 있는 청년층의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은 각각 48.1%, 45.3%였으나 2003년 시점에서 27.2%, 30.7%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반대로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코호트 1에서 2.9% → 10.1%, 코호트 2에서 5.7% → 13.1%까지 증가한다. 이후 2008년에는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은 소폭으로 증가해 코호트 1의 경우는 34.4%, 코호트 2에서는 36.1%까지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각각 2.7%, 5.0%까지 낮아져 1998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코호트 3과 4에서도 2003년 시점에서 상용·노무직 고용비중은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2003년 시점이 카드대란 시기에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10년과 이후 10년 동안의 청년층 고용변화는 20대 초반과 후반 연령계층에서는 전문·사무직 고용의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용·노무직 가구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 계층에서의 상용·노무직 고용감소는 기능직 및 생산직중 근로자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학력화에 따른 현장근로자(블루칼라)로의 유입이 줄어드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코호트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에는 2003년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비중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 후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코호트 3과 4의 경우에는 두 기간 모두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후기 청년기부터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청년층 고용형태별 소득수준 변화

여기에서는 20-30대 청년가구의 고용(가구주 기준)과 소득수준의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먼저 소득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4개 범주)과 고용형태(3개 범주)를 결합하여 모두 12개의 코호트를 구성하였다. 가구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2005=100.0)로 조정된 실질소득이며, 또한 가구구성원의 규모에 따른 후생수준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해당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준 균등소득이다. <표 2>는 1988년부터 2008년까지 각 코호트별 가구 경상소득과 청년층 본인의 근로소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4세 연령계층의 고용형태별 경상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무·전문직 및 상용·노무직의 경우는 각각 24.6%, 22.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근로소득의 경우는 사무·전문직에서 39.7%, 상용·노무직에서 27.2%로 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서는 경상소득 및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9.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소득은 1988년 425천 원 수준에서 이들이 35-39세가 되는 2003년에 710천 원까지 증가하지만 40-44세가 되는 2008년에는 665천 원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한다.

1988년 당시 25-29세(중기 청년기) 청년층은 약 20여년 동안 사무·전문직에서 23.1%, 상용·노무직에서 17.5% 근로소득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일용직에서는 6.2%로 근로소득이 낮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별로 절대적 소득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 이 연령계층이 35-39세가 되는 1998년과 45-49세가 되는 2008년에 근로소득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이들 고용형

〈표 2〉 청년층 코호트별(연령*고용형태) 소득수준 변화 : 1988-2008년

			1988	1993	1998	2003	2008	증가율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경상 소득	cohort 1	20-24세*사무/전문직	635	1,192	1,405	1,832	2,197	24.6
	cohort 2	20-24세*상용/노무직	548	982	1,019	1,317	1,554	22.1
	cohort 3	20-24세*임시/일용직	499	763	933	1,067	928	9.4
근로 소득	cohort 1	20-24세*사무/전문직	339	835	1,128	1,515	1,804	39.7
	cohort 2	20-24세*상용/노무직	343	786	872	1,093	1,144	27.2
	cohort 3	20-24세*임시/일용직	425	663	698	710	665	9.4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증가율
경상 소득	cohort 4	25-29세*사무/전문직	883	1,194	1,397	1,981	2,299	
	cohort 5	25-29세*상용/노무직	661	943	999	1,396	1,698	20.8
	cohort 6	25-29세*임시/일용직	502	881	778	1,006	1,145	17.9
근로 소득	cohort 4	25-29세*사무/전문직	663	1,018	1,148	1,586	1,874	23.1
	cohort 5	25-29세*상용/노무직	530	801	805	1,111	1,185	17.5
	cohort 6	25-29세*임시/일용직	481	714	602	707	651	6.2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증가율
경상 소득	cohort 7	30-34세*사무/전문직	887	1,266	1,635	2,259	2,894	
	cohort 8	30-34세*상용/노무직	612	935	1,087	1,503	1,806	24.2
	cohort 9	30-34세*임시/일용직	496	824	939	1,159	1,328	21.8
근로 소득	cohort 7	30-34세*사무/전문직	741	1,059	1,337	1,812	2,209	24.4
	cohort 8	30-34세*상용/노무직	508	759	824	1,094	1,120	17.2
	cohort 9	30-34세*임시/일용직	430	643	594	716	706	10.4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증가율
경상 소득	cohort 10	34-39세*사무/전문직	1,039	1,428	1,773	2,654	3,149	
	cohort 11	34-39세*상용/노무직	633	971	1,250	1,652	1,775	22.9
	cohort 12	34-39세*임시/일용직	473	902	892	1,210	1,158	19.6
근로 소득	cohort 10	34-39세*사무/전문직	871	1,199	1,429	1,931	2,103	19.3
	cohort 11	34-39세*상용/노무직	509	758	898	1,000	923	12.7
	cohort 12	34-39세*임시/일용직	362	593	536	665	608	10.9

주: 각 코호트별 소득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태에 소득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후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30-34세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가구의 경상소득이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무·전문직에서 소득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임시·일용직에서는 10.4%로 가장 낮은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수준의 절대규모는 각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1988년 당시에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던 34-39세 청년층은 외환위기(1998년, 45-49세) 시점과 2008년 시점(55-59세)에서 근로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표 3>에서는 각 코호트별 가구 경상소득 및 청년층 본인이 근로소득 수준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선 1987년부터 1997년까지 20-24세 청년층의

〈표 3〉 청년층 코호트별(연령*고용형태) 소득수준 변화 : 1987-1997년 및 1998-2008년 비교

			1987	1992	1997	증가율	1998	2003	2008	증가율
			20-24세	25-29세	3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경상소득	cohort 1	20-24세*사무/전문	606	1,107	1,530	36.2	1,186	1,610	1,997	18.9
	cohort 2	20-24세*상용/노무	490	899	1,161	33.3	895	1,343	1,487	18.4
	cohort 3	20-24세*임시/일용	416	635	903	29.5	613	962	1,015	18.3
근로소득	cohort 1	20-24세*사무/전문	327	798	1199	54.1	697	1,100	1,515	29.6
	cohort 2	20-24세*상용/노무	307	745	959	46.2	645	1,002	1,115	20.1
	cohort 3	20-24세*임시/일용	274	526	793	42.5	424	652	786	22.9
			25-29세	30-34세	35-39세	증가율	25-29세	30-34세	35-39세	증가율
경상소득	cohort 4	25-29세*사무/전문	710	1,155	1,639		32.2	1,371	1,679	
	cohort 5	25-29세*상용/노무	531	854	1,213	31.8	1,026	1,299	1,401	10.9
	cohort 6	25-29세*임시/일용	394	871	930	33.2	738	1,012	1,062	12.9
근로소득	cohort 4	25-29세*사무/전문	540	947	1302	34.0	915	1,340	1,633	21.3
	cohort 5	25-29세*상용/노무	426	717	923	29.4	760	1,043	1,083	12.5
	cohort 6	25-29세*임시/일용	333	730	751	31.1	623	785	727	5.3
			30-34세	35-39세	40-44세	증가율	30-34세	35-39세	40-44세	증가율
경상소득	cohort 7	30-34세*사무/전문	795	1,273	1,820		31.8	1,405	1,832	
	cohort 8	30-34세*상용/노무	513	892	1,255	34.8	1,019	1,317	1,555	15.1
	cohort 9	30-34세*임시/일용	370	813	1,003	39.4	933	1,067	917	-0.6
근로소득	cohort 7	30-34세*사무/전문	636	1047	1506	33.3	1,128	1,515	1,804	16.9
	cohort 8	30-34세*상용/노무	433	735	930	29.1	872	1,093	1,144	9.5
	cohort 9	30-34세*임시/일용	311	650	725	32.6	698	710	665	-1.6
			35-39세	40-44세	45-49세	증가율	35-39세	40-44세	45-49세	증가율
경상소득	cohort 10	34-39세*사무/전문	834	1,413	2,006		34.0	1,397	1,981	
	cohort 11	34-39세*상용/노무	540	924	1,374	36.6	999	1,396	1,707	19.5
	cohort 12	34-39세*임시/일용	356	841	1,089	45.2	778	1,006	1,155	14.1
근로소득	cohort 10	34-39세*사무/전문	721	1205	1570	29.6	1,148	1,586	1,874	17.7
	cohort 11	34-39세*상용/노무	438	795	922	28.1	805	1,111	1,185	13.8
	cohort 12	34-39세*임시/일용	291	617	702	34.1	602	707	651	2.6

주·자료 : <표 2>와 동일.

가구소득과 본인 근로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상소득의 경우 사무·전문직 가구에서 36.2%, 상용·노무직 가구에서 33.3%, 임시·일용직 가구에서 29.5%의 소득증가가 나타났고, 같은 시기 20-24세 청년층의 근로소득은 사무·전문직에서 54.1%, 상용·노무직과 임시·일용직에서 각각 46.2%, 42.5%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 현재까지의 동일 코호트의 경상소득과 근로소득 증가율은 고용형태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전 시기(1987-1997년)에 비해 소득향상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5-29세 중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근로소득은 1987-1997년 시기에 사무·전문직에서 34.0%, 상용·노무직에서 29.4%, 임시·일용직에서 31.1%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에는 사무·전문직의 근로소득은 12.7%p 낮아진 21.3%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용·노무직에서는 16.9%p 낮아진 12.5%, 임시·일용직에서는 무려 25.8%p 낮은 5.3% 증가에 그치고 있다. 30-34세 및 35-39세 코호트의 경우도 1987-1997년 시기에는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30%를 상회하는 근로소득의 진작이 나타나지만, 1998-2008년 시기에는 소득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30-34세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에 근로소득이 32.6%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은 마이너스 증가율(-1.6%)을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은 고용형태 구별 없이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의 증가율 자체가 높은 반면, 고용형태별 소득수준의 격차도 크게 심하지 않았던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격차도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이 과거 10년 동안에 비해 좋지 않았던 점이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며, 이들 계층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사정 악화가 소득의 악화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은 최근 경기회복 기조에 따른 고용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고용변동과 소득수준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전반에 나타난 고용악화가 청년 개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초기 청년기(20-24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후기 청년기 혹은 장년기로 이어지는 현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층 고용악화가 가구의 소득수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가구단위의 미시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코호트 분석을 통해 고용불안정이 초기 청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후기 청년기 혹은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가구소득 및 본인의 근로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시점(1987-1997년)에 비해 최근 10여년(1998-2008년) 동안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었으며, 아울러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절대적 소득규모가 작고, 고용형태간 근로소득의 격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었다.

청년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직장체험, 훈련, 인턴제도 등 다양한 정

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질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안정된 소득확보와 연관이 깊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기에 경험되는 고용불안은 개인의 생애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향후 청년층 고용의 문제는 청년층이 기존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고용정책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적극적 정책과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이나 고용지원서비스 이외에도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금의 실질적 (상향)조정,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청년층의 실업이나 고용불안이 생계곤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정책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무직자가구(실업가구)가 분석에서 누락되어 있어 실업에 의한 소득수준의 변화와 격차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청년층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전체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코호트 분석은 동일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구성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시점의 표본이 동일인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패널분석보다 측정된 정보와 변화된 내용에 정확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 현재 구축중인 패널자료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청년고용과 소득수준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고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2010),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손혜경(2009), 『스웨덴의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7(8), pp.68-75.
 정성미(2010), 『20대 청년 노동시장 동향분석』, 『노동리뷰』 62, pp.32-44.

〈부표 1〉 연령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1981-2009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81	4.4	0.1	4.7	5.4	8.8	8.8
1982	7.8	2.7	-1.3	4.2	3.9	3.9
1983	0.9	3.7	1.3	-0.2	1.6	1.6
1984	0.4	0.5	0.0	-1.8	0.0	0.0
1985	1.6	7.4	0.9	6.9	6.9	6.9
1986	3.3	5.6	0.4	4.9	7.6	7.6
1987	2.6	7.5	4.3	5.8	11.1	11.1
1988	0.0	4.5	4.3	9.0	3.8	3.8
1989	2.0	2.5	3.7	9.3	10.0	10.0
1990	1.0	4.4	2.5	4.7	6.4	6.4
1991	10.9	11.0	-6.8	-5.3	-4.0	-4.0
1992	-0.7	2.9	2.0	3.5	8.8	8.8
1993	-1.9	3.4	3.2	0.9	1.8	1.8
1994	1.9	3.0	4.8	2.0	9.4	9.4
1995	2.7	1.4	6.3	0.6	7.9	7.9
1996	0.0	1.7	5.6	0.2	6.7	6.7
1997	-1.1	0.8	4.5	2.1	7.0	7.0
1998	-11.3	-5.9	-1.5	-4.7	-4.1	-4.1
1999	-1.4	0.0	5.3	1.5	6.1	6.1
2000	3.5	2.0	8.0	2.5	5.3	5.3
2001	-0.7	0.5	5.4	2.1	5.5	5.5
2002	0.7	0.7	5.3	4.7	6.4	6.4
2003	-3.4	-0.4	3.0	2.5	-2.8	-2.8
2004	-0.3	-0.1	2.9	5.0	5.4	5.4
2005	-2.6	-1.0	1.6	7.9	5.5	5.5
2006	-3.5	0.2	1.6	6.6	5.1	5.1
2007	-1.7	-1.6	1.2	6.7	4.6	4.6
2008	-2.5	-0.4	1.0	5.1	0.7	0.7
2009	-3.0	-2.9	-0.4	4.6	2.0	2.0

자료: 통계청, KOSIS.